지방선거 빈자리… 7·30 재보선 관심 '후끈'

광주 광산을, 천정배·서정성·이남재 등 예상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출마·김효석 거론

6·4 지방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7·30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로 인해 광주 광산을과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 두 곳이 보궐선거 대상이 됨에 따라 출마자에 대한 예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애초 7월 재보선 가능성이 점쳐졌던 나주·화순과 순천·곡성의 경우 상황에 따라 10월 재보선을 예측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19일 이개호 F1(포뮬러원)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7·30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 같은 분위기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월 재보선 공천방식을 놓고도 각종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때문에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반대로 또다시 전략공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물론 광주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계와 안철수계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개씩 나눌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는 등 6·4 지방선거 열풍의 한쪽에서는 7월 재보선 논의가 한창이다.

◇**광주 광산을**=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이용섭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면서 생겨난 자리다. 이 자리를 놓고 지역정치권에서는 벌써 새정치민주연합 김효석 최고위원, 천정배 전 의원, 서정성 안철수 대표 보좌관, 이남재 전 민주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대상자들 모두 "아직은 생각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그동안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이들의 출마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전략공천할 경우 무게감으로 볼 때는 김최고위원과 천 전 의원의 가능성에 더 점수를 주는 분위기나 오히려 당 중진이 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할 수 있는 지역에 출마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 참신한 인물을 찾을 경우 서보좌관과 이 전 실장이 거론되나 인지도가 낮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정을 전제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이용섭 의원과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광산을에 무소속 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이낙연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로 자리가 빈 이 자리에 일단 이개호 사무총장의 출마는 확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출마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고 조심스럽게 출마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선거 준비에 뛰어들기보다는 이낙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 전 군수 측 관계자는 "경선 패배 후 자중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번 총선에 나온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때 다시 나온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담이란 지적이 높다.

장성이 고향인 김효석 최고위원은 전략공천 카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성정책 과제 선정 발표

광주·전남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6·4 지방선거 광주전남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정책 3대 핵심과제, 7대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이날 3대 핵심과제로 ▲여성 1인 가구 주거정책 강화 ▲여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 ▲성평등기획관 신설을 제시했다.

이어 7대 분야과제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폭력· 인권·안전한 도시 조성, 여성의 건강·복지 환경 조성, 여성 생활·문화정책 구축, 성 평등 도시 구축 등을 제안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전투표 체험

19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1층 선거체험관에서 사전투표체험행사가 열렸다. 지방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사전투표제도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철수 대표 폭력사태 공방

윤장현·이병완 "진상규명·철저한 수사 해야"
강운태·이용섭 "당원·시민 구속이 새정치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광주 방문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와 관련, 광주시장 후보들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방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윤장현·무소속 이병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가 서로 공동 전선을 형성해 대응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이병완 후보는 19일 "폭력으로는 어떠한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무소속 이병완 후보와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34주년을 맞아 '인권과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심야에 제1야당 대표를 감금, 폭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자, 정치적 구태고, 테러"라며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진상규명, 재방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정치적 노선과 가치를 떠나서 광주에서 (이번 사태가)벌어졌다는 것이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면서 "낡은 정치형태의 가장 못된 표현은 폭력이며, 정치적 견해를 넘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녹아드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강운태 후보와 이용섭 후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 내려와서 봉변을 당한데 대해 광주시당은 정치테러라며 검경에 수사를 촉구했다"면서 "당원과 시민 구속하라는 것이 안철수의 새정치냐"고 반발했다.

두 후보측은 "당원과 시민들은 낙하산 공천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명을 듣기를 원했지만 안철수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5·18 묘역을 버젓이 누비는가 하면 TV방송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공천만행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기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항의하려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 교통방해 등)로 A(58)씨와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민 희망펀드' 출시

목표액 5억… 오늘부터 모집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는 19일 "광주시민의 힘으로 광주의 새희망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윤장현의 광주시민희망펀드'를 20일 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민희망펀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목표액은 5억원이다.

20일 9시부터 펀드 모집을 시작해 목표액이 달성되면 펀드모집이 마감된다. 1인당 1만원부터 가능하며 제한액은 없다. 희망펀드의 상환일은 오는 8월 4일이다.

상환 때는 펀드 가입자에게 원금과 함께 연 3%의 이자가 지급된다. 펀드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계좌번호로 상환액이 입금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알기쉬운 선거법 〈14〉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선거여론조사 개시 2일전까지 신고

문〉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해야 하나?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 설치**=지난 2월13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선거와 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산하에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심의기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추천 각 1명, 학계·법조계·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공표·보도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구·시·군 단위 지역 신문 등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과 공표·보도 전 예외 없이 사전등록 해야**=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예외 없이 사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등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이나 방송사·신문사 등의 경우도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그 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사전등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등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때에도 같다.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 전 7일 이전의 자료가 등록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공표·보도 없이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고하거나 선거일 당일 출구조사 등 등록기간이 아닌 때 공표·보도하는 경우는 등록 의무가 없다.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할 사항**=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 포함),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 등 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해야 한다.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